

오세훈, '토허제 확대 추진' 낙달 만에... "해지 적극 검토"

(서울시장)

‘압여목성’, ‘잠삼대청’ 만료 앞둔 토허제, 시 면적 10% 넘게 차지 본래 용도 없어... 유명무실 지적 서울시, 규제풀기로 분위기 반전

서울 주요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나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장 오는 4월에 ‘압·여·목·성(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1·2가)’의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으며,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지정기간도 올해 6월까지로 재지정 없이 해제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서울시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5.25㎢다. 시 면적(605.24㎢)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토허제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허제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기 힘들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토허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서울에선 용산정비청 개발사업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모두 서울시장의 지정했다.

토허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투기 방지 등 당초 제도의 취지보다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용도로 쓰이면서

다.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매년 재지정으로 기간이 늘면서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커졌다.

토허제 구역 중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공공개발 후보지 등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주요 재건축 단지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모아타운 등이다.

특히 ‘잠·삼·대·청’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등대로 복합개발사업을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이후 매년 재지정으로 5년 가까이 묶여있고, 주요 재건축단지라며 지정된 ‘압·여·목·성’ 역시 지난 2021년 4월 이후 재지정이 반복되고 있다.

토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신고가가 속출하고, 불허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들어 서울시가 대대적인 규제 풀기에 나서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철폐 요청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토허제 확대를 내세웠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8·8대책’ 다음 날 브리핑을 갖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허제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산업부, 전기차 보조금·이차전지 정책금융 확대 지원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도 추가 지원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7.9兆 투입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친환경차 성장 둔화로 영향을 받는 이차전지업계에도 7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제조사할인 인센티브)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만 19세~34세)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해 수요증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5249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최대 580만원, 제조사 할인 600만원 가정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조사할인 인센티브 140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최종 구매가격은 45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장도 가격 4600만원보다 88만원 낮은 수준이다. 또 청년 첫차 구매시 116만원이 추가 할인된 4406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혀 소

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할증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선 지속 점검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

소화를 위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하고,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 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세액공제는 30~50%, 투자세액공제는 15~3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1월 중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

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한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위, 대형 금융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봉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본격화 시범운영 참여사 대상 컨설팅 등 진행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책무구조

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하기 어려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7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시정된 경우에는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지연 기자 yul115@